

# 대전 공장 폭발사고에 여야 유세 취소… 유가족 지원 총력

지도부, 일정 취소하고 현장 방문  
민주당, 선대위 비상가동체계 전환  
국민의힘 “사고 수습에 최선” 당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총괄상임선대위원장)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상임선거대책위원장)가 1일 예정된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오후에 폭발사고가 일어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을 찾았다.

양당에 따르면 이삼걸 경북 안동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정 대표는 사고 소식을 듣고 오후 5시를 전후해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공장을 방문했다.

정 대표는 “대형참사 앞에선 선거운동보다 유가족들 아픔에 함께하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며 “즉시 현장에 가서 사고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현장방문엔 조승래 사무총장과 박정현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정용래 유성구청장 후보 등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



1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 출입구로 긴급재난대응차량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종료까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을 비상가동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6월1일 오전 6시를 기해 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되는 3일 오후 6시까지 60시간 상황실 비상가동체제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모든 정무직, 사무직 당직자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즉시 소통체계를 유지하고, 본부장단회의 급 참석자의 경우 즉시 현장소집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또 전국 현장 조직, 직능, 언론, 온라인 여론, 후보자 동선 및 메시지 등 상시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 보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시 상황 점검 및 보고·집행체계도 유지한다.

당원을 대상으로는 “전 당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선거운동에 임한다” “자만하거나 오만하게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철저히 경계한다” “낮고 겸손한 자세로 유권자들에게 우리의 간절함과 절실함을 진정성 있게 전달한다” 등의 행동 수칙이 전달됐다.

민주당은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내부 공지에 “투표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실하게 임해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며 “전 당직자께서는 기동 태세를 갖추고 선거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유세 지원차 이날 제주도를 방문한 장 대표도 오후 7시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현장을 방문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장 선대위원장 및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의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선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시하여 적극 대응해주시길 바란다”며 “전국의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각급 선대위는 대전 사고의 인명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걱정을 모아주시고,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에 극도로 유의할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장 위원장은 제주와 울산, 송 위원장은 경기를 돌며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들을 취소했다.

/서울신문 기자 syj@metroseoul.co.kr

## 국민의힘, ‘정원오·박찬대 방지법’ 추진

단체장 후보 토론회 3회 이상 의무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위한 취지”  
민주당 “野, 네거티브 선거에만 집중”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겨냥한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오 방지법”과 박찬대 22촌 사칭 사기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토론을 회피하고 거짓 이력으로 선거를 허탈하게 만드는 민주당 후보자들을 심판하고 정당당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정원오 방지법”은 시도지사 후보의 토론회를 최소 3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정 후보가 토론회를 회피하고 있다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토론회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어 박찬대 사기방지 3법”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며 “선거 후보자가 등록할 때 구체적인 촌수와 관계를 명시하도록 해 유권자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직 중인 공직자들이 혈연관계를 허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명예를 허위로 더럽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했다.

앞서 독립유공자 박진해 선생의 작계 5대손인 박기현씨는 지난달 29일 박찬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가 ‘22촌’임에도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소개한 것은 진짜 후손들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울러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를 나와 무효표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들어간 것에 대해 “사실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부천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투표 하나를 누락해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선거관리위원들이 전부 막아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것이 정상적인 선관위의 업무 자세”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선 이후 관련 사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방으로만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무슨 방지법, 금지법을 추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한다고 하는데 대국민 호소, 말하지만 마지막 호소가 후보자 비방과 정부에 대한 비방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조 본부장은 “마지막까지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로 선거를 일관하겠다는 의도만 보인다”며 “오려려 지금 필요한 건 선거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땃글땃글 운영 의혹’, 박원수 경남지사 후보 ‘딤페이 크 영상 제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불법

으로 점철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시는 선거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지금 필요한 건 ‘국민의힘 방지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상 총무본부장은 “국민의힘은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한 개헌에 반대했던 게 잊그제 일”이라며 “우리 공동체 명운이 달린 계엄 방지에 관해 반대한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무슨 방지법을 이야기한다는 건 국민들께서 납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기자

## 민주당 “서울·부울경 등 6곳 접전”

“전북지사 판세 호전되고 있어  
대전·세종·충남·충북 안정적”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서울 및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총 6개 지역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접전 양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1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광역단체장 기준 지방선거 판세를 묻는 말에 “6곳이 여전히 접전이라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서울·부산·울산·경남·대구·전북을 접전 지역으로 봐 왔다.

조 본부장은 이들 지역 중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김광영 무소속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전북지사 선거를 두고는 “도당 보고라든지 제가 1박2일 내려가 상황을 점검했다”며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판단”

이라고 했다.

충청권 격차가 좁혀진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선거 전략상 접전이 아닌데 접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4곳은 안정적”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재보선 격전지인 경기 평택을 판세를 두고는 “우리 김용남 후보가 조국 혁신당의 네거티브 공세와 일부 언론의 검증 공세, 국민의힘의 공격이라는 삼중 공격을 견디며 잘 버티고 있다”고 재차 평가했다.

소위 ‘정원오·박찬대 방지법’을 거론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국민 마지막 호소일 텐데 후보자 비방과 정부에 대한 비방만 가득했다”며 “마지막까지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로 선거를 일관하겠다는 의

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건 선거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며 “오세훈(서울시장) 후보는 땃글땃글 운영에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고, 박원수(경남지사) 후보는 딤페이 크 영상 제작에 공무원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두겸(울산시장) 후보는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에 ‘비를 피하려 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며 “불법으로 점철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시는 선거에 발 들이지 못하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힘 방지법”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을 두고는 “과거 권력에 기대 선거 국면을 끌고 가려는 구태 중 구태”라며 “상식적 국민은 비리로 감옥에 가고 국정농단으로 파면돼 감옥까지 갔던 두 대통령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 李 “사고 수습·인명 구조 최우선” 지시

대전 한화에어로 폭발사고에  
“추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고를 보고 받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대전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상황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인근 지역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고,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강조했다. 소방청은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 당시 현장에 7명이 있었으며 사고로 이 가운데 4명이 숨졌다. 또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1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기자